

AI 매몰장소로도 국유림 제공 산림청, 살처분 범위확대로 매몰지 부족 예상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당국이 가금류 및 그 생산물의 매몰처분 범위를 AI 발생 지 반경 3km로 확대함에 따라 매몰장소가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지난달 27일부터 국유림을 매몰 장소로 제공했다.

산림청은 이날 이후 전남 나주시 및 영암군 등 고병원성 AI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국유림을 제공해 주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이미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가 낳은 오리알 2만개를 국유림에 매몰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는 것.

한편 산림청은 이날까지 전국 14개 시·군에 걸쳐 20개 소 1만412㏊의 국유림을 소, 돼지 등 살처분 가축 3만8천여 마리 매몰 장소로 제공했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고병원성 AI 피해지역

지자체로부터 매몰과 관련된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매몰지 제공요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국유림에 우선 매몰한 뒤 사후에 행정처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대부료·사용료를 모두 면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업농신문 · webmaster@palnews.co.kr · 2011.1.31

오리, 2월부터 원산지표시제 본격단속실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8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원산지표시 신규대상 67개 품목과 오리고기, 배달용닭고기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에 대해 계도기간이 2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월 1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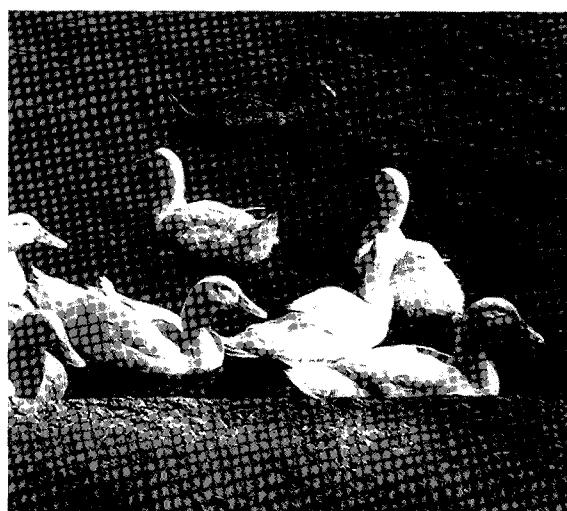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기 제작한 포장재도 제작비용 등을 감안 6개월간 사용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나 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11일부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미표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뉴시스 · 2011.2.8

충남가축研 ‘인플루엔자 전용실험실’ 갖춰

충남가축위생연구소(소장 오형수)에 닭과 돼지 등 각종 가축의 인플루엔자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실험실이 설치됐다.

충남가축위생연구소는 10일 “소내에 설치된 ‘인플루엔



자 검사 전용 실험실' 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생물 안전 3등급 병원체 취급시설로 인정됨에 따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10억3천만원이 투입돼 지난해 말 완공된 인플루엔자 검사 전용 실험실(건물면적 201㎡)은 일반실험실과는 달리 출입동선이 다른 데다 공기 정화를 통해 실험자 보호는 물론 외부로 배출되는 모든 실험물품을 완전히 멸균함으로써 병원체의 외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정 실험시설'이다.

오형수 소장은 "이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돼지인플루엔자, 구제역 검사 등 가축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이은파 기자·sw21@yna.co.kr·2011.2.10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보상을 빙자, 수법도 점차 다양해져…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보상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축협직원,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보상금을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는 등 그 수법도 점차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의 살처분으로 엄청난 심적 아픔을 겪고 있는데다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내에서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외부출입도 자제하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천벌을 받을 짓이다.

지금 현장의 축산 농가는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과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농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살처분 보상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은 영농 재기의 끈마저 봉쇄시켜 해당 농가를 두 번 죽이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자 지자체와 관계당국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구제역 보이스피싱 사범 전담검사를 지정했으며 지역경찰청은 TF팀을 구성해 범인 검거 및 피해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농가 역시 피해보상을 운운하는 사람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은 만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이스피싱은 철저한 사전 예방만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많은 수가 순박한 농어민이기에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과 함께 신속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민신문·2011.2.10

AI, 구제역 살처분 가축 위해 '천도재'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살처분을 당한 가축들의 영혼을 달래 주는 천도재가 열렸다.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속리산 법주사(주지 노현)는 10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으로 전국에서 희생된 가축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천도재를 불교단체와 신도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찰 대웅전에서 열었다. 이번 천도재는 자연과 인간, 동물이 모두 같은 생명을 지

난 존재임을 성찰하는 한편 평화세상을 기원하고, 구제역 종식을 발원키 위해 마련됐다.

법주사는 이날 구제역으로 희생 된 가축의 영정과 함께 전조와 무, 당근, 호박, 양배추 등 가축들이 좋아하는 먹을 거리를 천도재에 올려 강제로 살처분 된 가축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또 천도재는 시름과 절망에 빠져있는 농가와 매몰지역에 투입돼 일하는 모든 관계자,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매일 밤샘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등을 위로하고, 구제역의 종식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치러졌다.

노현 법주사 주지는 “비록 질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가축들이 희생당해 안타깝다”며 “영혼이라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천도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뉴시스·김기준 기자·kkj@newsis.com·2011.2.10

서울시, 닭·오리고기 등 포장유통 점검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까지 닭·오리고기, 계란의 포장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닭·오리고기, 오는 4월부터 계란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미포장 제품의 보관과 진열,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허위·과대광고, 보관규정 위반 등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하고 부적합 제품은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매일경제·뉴스속보부·2011.2.14

제주, 닭·오리 반입 금지 한시적으로 풀기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닭·오리 고기 등 가금육과 종란 반입을 금지했던 조치가 한시적으로 풀렸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충북에서 생산한 닭·오리 고기와 종란에 대해 일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기간은 가금육은 오는 15~16일, 종란은 17~18일이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가금육 등에 대해 제주지역 반입을 금지한 뒤로 제주에서 생산하는 가금육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존에 반입한 가금육 재고도 모두 떨어져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반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서를 작성, 반입하려는 날로부터 하루 전(시행 당일 도착분은 당일 오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가축방역관을 해당 지역으로 보내 신고된 품목의 원산지와 소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선일보·오재용 기자·island1950@chosun.com·2011.2.14

농식품부 “방역체계 개선 TF 구성할 것”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이번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정승 제2차관을 단장

으로 운영되던 ‘축산선진화 TF’를 발전시켜 TF를 구성할 계획이며, TF단장을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TF에는 국내·외 축산분야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참가하며, 농식품부는 지역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축산업 발전 기본방향과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라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축방역대책을 포함해 축산업 관련 모든 시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 이인준기자 · ijoinon@newsis.com · 2011.2.14

매몰지 침출수 유출 땐 “呻~” 경보

정부, 구제역 종합관리대책 발표

IT센서 부착해 24시간 감시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첨단 정보기술(IT) 장비로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을 24시간 감시하는 ‘토양 오염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구제역 확산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3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전국 가축 매몰지는 4,632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미 조

사를 마친 낙동강·한강 상류 주변 매몰지를 제외한 2,90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조사를 통해 봉괴나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비탈진 곳에 위치해 봉괴 가능성이 큰 매몰지에는 옹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천 주변 매몰지에는 침출수 차단을 위한 차수벽을 설치할 방침이다. 매몰지에 박아놓은 침출수 관에 전자태그(RFID) 센서를 부착해 침출수 유출을 24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을 때 일률적인 매몰 대신 소각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가축 살처분 수단도 병행하기로 했다.

물관리 대책도 내놨다. 전국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의 관정(우물) 3,000곳에 대해 지하수 수질 조사를 하기로 했다. 매몰지가 상수원 인근에 있거나 오염 우려가 큰 지역의 관정 1,000곳을 가려내 지하수 미생물 조사도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매몰지 보강 공사를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장맛비가 땅속에 스며들어 지반이 물러지면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옹벽 등이 봉괴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 양원보 기자 · 2011.2.16

엄격한 자율적 통제와 관리… ‘믿음의 생명산업’ 뿌리내려야

포스트 구제역 AI, 희망 사다리를 세우자

지상포럼 양계·오리

• 노후시설 현대화 기반 생산성 향상…경쟁력 높일 기회로

- 책임의식 강화…양보와 대화합 통한 상생의 '새 장' 조성
- 국가적 종자개량사업 추진…적절한 수급 대응 통한 안정 도모
- 수의 관점 넘어 생산·소비까지 고려 포괄적 방역시스템 구축을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

AI사태로 인해 오리산업은 비상에 걸렸다. AI로 인해 오리 피해규모가 커지면서 매물처 분된 종오리가 많아 수급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종오리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장기화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오리가격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오리가격 상승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가격 상승은 곧 수입량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해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등이 시행되고 있고 업계 자율적으로 국내산 오리고기 확인필증발급(인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입산과 차별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원종오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국내 PS 생산·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수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본격 시행되고 있는 종오리업 등록제가 하루 속히 정착되어 검정되지 않은 오리가 종오리로 사용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품질의 오리생산을 통해 명실공히 오리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김만섭 대표(모란식품)

구제역과 AI사태를 겪으면서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

다. 상황이 어찌됐든 가장 시급한 것은 구제역과 AI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축산업계는 만신창이다. 축산업계가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제역과 AI사태를 겪으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선 농가들의 방역의식을 높여야 한다. 또 구제역과 AI 확산의 한 원인인 사료, 분뇨, 왕겨 등 농장 출입차량들에 대한 차량은 물론 운전자들까지 소독할 수 있도록 차량소독시설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축산진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축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한편 간척지를 활용해 철저한 시설을 갖추고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항, 항만 등 국경검역에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며 농가들 역시 농가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보상금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준동 회장(대한양계협회)

가금 농가들이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 하지만 가금농가들은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좀 더 표준화된 시스템 속에서 차단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는 이참에 SOP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산란계에 대해서는 케이지 규격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정 마리수를 새로 정해 과잉 생산이 안 되도록 하고, 아울러 유통 개선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육계는 계열화사업법이 빠른 시일에 만들

어져 상대적으로 힘든 농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특히 사육비 현실화로 육계농가가 잘살 수 있게 시스템이 갖춰져야 방역도 그 만큼 철저해 질것이다.

종계는 올해부터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갔다. 종계·종란 생산성 향상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성배 회장(한국계육협회)

 우선 육용계 사육업자 여러분에게 힘을 내자고 말하고 싶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과 AI 사태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얼룩진 축산농가와 관련업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 와중에도 종계나 육계 산업은 AI 발생이 심한 편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듈다. 이는 모두 계육협회 회원농가를 포함 전국의 육용계 사육농장별로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쓴 덕택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장별 차단방역이 미진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계 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농장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업계가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방역은 극히 일부의 무관심과 안일한 사고로 구멍이 뚫린다는 것을 생각하자.

오정길 조합장(한국양계농협)

 국가의 국경 검역과 지자체의 방역 강화가 질 병 방역의 기본이다. 이 기본적인 국경 검역과 차단방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종자 수급을 민간인들에게 맡겨왔다. 앞으로 원종계(GPS)나 종계(PS)를 한우나 양돈처럼 국가에서 일

부 담당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려한다. 허가제는 축산물의 수급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방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해 봤으면 한다.

양계농가들은 이번의 어려운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방역과 사양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것 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소비자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축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는 하나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고, 그 불씨는 살아나기 마련이다.

김정주 교수(건국대학교)

 최근의 구제역과 AI 발생은 사상 유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이다. 한두 사람노력으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 허점이 있을 것이다. 방역 전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농가에서는 정부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내 농장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도 방역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 보고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동물복지 를 고려한 축산이 늘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12년에 산란계시장에 케이지시설이 없어진다. 국내 농가들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육계는 생산 농가와 계열사의 관계가 서로양보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국내 소비성향을 살펴보면 닭고기가 소고기를 점유율을 능가할 정도로 육계시장도 날로 성장되고 있다. 이같은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계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 그만큼 연구인력도 많이 양성됐으면 한다.



서옥석 과장(국립축산과학원)

축산업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새판을 짜지 않으면 오늘과 같은 재앙은 계속될 것이다. 사료 뿐 아니라 종자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 축산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환경과 복지를 생각하는 축산이 요구된다.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등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종자산업의 중요성도 인식해야 한다.

빠르게, 많게, 값싼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양계산업 구조개선이 아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친환경과 복지가 강조되는 가운데 산업이 성장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경쟁력도 올라간다.

방역시스템도 흐름을 타고가다 보면 택상공론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 축산과 수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생산과 수의, 소비 등 모든 분야에서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



문정진 상임부회장(한국토종닭협회)

전국에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HPAI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전국 어디도 AI안전지대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중국 등 인접 국가들 역시 AI가 발생하고 있어 철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양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구제역과 AI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축산업이 외면 받지 않도록 축산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가들은 보다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적 불편을 초래한 만큼 농가

들도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산업등록제 등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소독 등 철저하게 지키는 반면 일부 제도권 밖에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축산을 영위하는 농가들로 인해 대다수의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

축신신문·이희영기자·2011.2.16

오리값 강세

AI 확산 여파

오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오리 살처분 물량이 급증한 데다 이동제한으로 인해 유통물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17일 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전남 나주 등 전국 주요 산지에서 출하되는 3kg 내외의 오리 평균가격은 8,000원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 10.2% 올랐다. AI가 발생하기 직전인 작년 11월 말에 비해선 17.1% 뛰었으며,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19.4% 비싼 가격이다.

1차 가공을 거친 오리 신선육 가격도 함께 상승했다. 지난달 산지에서 평균 8,258원에 거래되던 2kg짜리 상품은 9,000원으로 올랐다. 1년 전에 비해서는 16.8% 뛰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작년 12월 발생한 AI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살처분 물량이 250만마리에 달해 출하 물량이 감소한 탓이다. 이는 전체 사육 물량(1,200만여마리)의 20%를 넘는 규모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전국 오리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전남 지역의 피해가 커던 것

이 출하량 감소의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알을 낳는 종오리가 대거 AI에 감염돼 매몰 처리되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오리 사육이 위축될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부화한 지 하루된 새끼오리 평균 가격도 1,600원으로 이 달 들어 23% 상승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60%에 달한다.

한국경제·김철수 기자·kcsoo@hankyung.com·2011.2.17

화순·장흥·여수 닭·오리 이동제한 풀려 AI바이러스 잔존 검사 ‘음성’

세 지역 농가 곧 재입식 가능

매몰 처분이 이뤄진 농장은 3주 입식시험 거쳐 정밀검사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화순·장흥·여수지역 닭·오리 농장 등에 내려졌던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주부터 실시한 AI 경계지역 내 모든 닭·오리 사육 농가의 시료 대한 AI바이러스 잔존 여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되면, AI가 발생해 매몰 처분이 이뤄진 농장은 별도 분변검사와 3주간의 입식시험 후 정밀검사를 거쳐 재입식을 할 수 있다. AI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오염지역은 발생 농장의 입식시험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이 가능하다. 반경 500m~10km의 위험·경계지역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절차 후 곧바로 재입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순·장흥·여수지역 닭·오리 농장들은 조만

간 재입식이 가능하다.

보성지역은 매몰처분이 이뤄진 후 아직 3주가 지나지 않아 이동제한조치 해제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나주·영암지역은 이날부터 실시하는 혈청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동제한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도는 “전남은 AI 추가 발생이 없지만,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 AI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16일 도내 104곳의 AI 발생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점검 결과, 일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침출수 배출관은 매몰지 104곳 중 42곳만이 제대로 설치됐다. 나머지는 배출관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수로·저류조 설치도 영암 6곳과 나주 15곳 등 21곳이 물받이 등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나주시 동강면 장동리 매몰지는 논 인근에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실제로 외부로 흘러 나왔거나 매몰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현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이해석 기자·2011.2.22

농협 축산컨설팅부, 구제역·AI 종식 후 ‘재입식 요령’ 동영상 제작 배부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는 최근 구제역·AI 종식 후 ‘가축 재입식 요령’에 대해 축종별 동영상을 제작해 재입식 농가 교육용으로 활용토록 일선 축협 등에 배부키



3월 오리소식

D u c k ' s N • E • W • S

로 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동영상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AI 긴급행동지침’을 바탕으로 일반 축산농가가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축종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현장감 있게 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축산컨설팅부 내에 자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축종별 전문가, 축협 컨설턴트, 협업 담당자, 현지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4개 축종에 대해 제작키로 했다.

송택호 농협 축산컨설팅부장은 “이번 동영상 제작은 위기에 처한 우리 축산업을 조기에 재건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포스트 구제역·AI 대책의 일환으로 제작하게 된 것으로 축종별로 제작된 동영상이 많은 축산농가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방역여건을 감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양축농가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산컨설팅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축산컨설팅부는 시연회를 거쳐 동영상이 제작되면 CD에 저장해 전국 축협과 유관단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며, 축산농가나 필요한 사람들이 축산사이버컨설팅 홈페이지(<http://livestock.nonghyup.com>)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등재할 예정이다.

라이브뉴스·박유신 기자·yusinya@allnews.co.kr·2011.2.22

올 농가 평균소득

3,420만원

농경연 ‘2011 농업전망’… 작년보다 0.9% 증가 그칠듯

올해 농업생산액은 44조9,88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증가할 전망이다. 농가 평균소득은 3,420만원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세계 경기회복 속에 유가 급등 등의 여파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농산물 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보여 올해 농가경제 전망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고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농업전망 2011’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올 농업생산액은 쌀 생산액이 지난해보다 5.9% 증가하는 등 재배업과 축산업 생산액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조2,680억원(2.9%) 늘어날 전망이다.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전반적인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3.4% 감소한 21조5,600억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업총소득도 전년대비 7.6% 감소한 12조3,390억원에 머물 전망이다. 다만 농가 평균소득은 농업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따른 농외소득과 이전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3,420만원으로 예상됐다.

올 경지면적은 170만1,000㏊, 농작물 재배면적은 180만1,000㏊로 전년대비 각각 0.8%, 1% 감소할 전망이다.

벼 재배면적의 경우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85만5,000㏊로 추정된다. 평년단수를 적용한 쌀 생산량은 426만8,000t으로 예측됐다. 2011양곡연도 연평균 쌀값은 지난해보다 5.5% 상승한 14만4,000원(80kg) 안팎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부문에서는 올해 한우 수소 산지값이 600kg당 450만~47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연말 마릿수 기준으로

전년대비 1% 증가한 295만마리로 전망된다. 돼지 사육마릿수는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물량을 감안할 때 연평균 720만~730만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양돈업이 구제역 이전 수준의 사육마릿수를 회복하기까지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농경연은 내다봤다.

생활물가와 밀접한 채소류의 경우 지난해 전반적으로 값 강세가 지속됐던 영향으로 올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배추와 무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각각 18%, 4% 증가한 3만9,382㏊, 2만4,49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일류는 재배면적이 11만6,000㏊로 전년보다 33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사과와 복숭아가 각각 500㏊, 570㏊ 증가하는 반면 배, 감귤, 단감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민신문 • 이경석 기자 • kslee@nongmin.com • 2011.2.25

【3백자발언대】

AI 사태로 F1 오리 균질
안정적 산업 발전 기회로



김 만 섭 대표
모란식품

지난해부터 발생한 AI로 인해 오리산

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오리만 217만수에 달하고 이중 종오리도 48만수에 이른다.

이로 인해 지금 오리업계는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다행히 과거 AI사태와 달리 소비 감소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종오리 48만수가 살처분됨에 따라 지금 당장 뿐만 아니라 향후 몇 개월간 수급불안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오리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위기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살처분된 종오리의 상당수가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수입된 PS종오리가 아닌 F1오리였다.

그동안 오리업계는 F1 오리 균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검정도 받지 않은 F1오리가 무분별하게 사육돼 왔다.

당장은 오리수급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F1오리를 균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오리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축산신문 • 2011.2.28



※월간 오리마을 2월호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기자가 기고한 칼럼(29p)에 일부 내용이 잘못 게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보도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에 이어 전북 익산, 함평, 나주, 영암 등 전남 지역을 휩쓸데 이어 경기 안성, 이천, 파주까지 확산됐다.”

오리마을 2월호에 게재된 바와 달리 전남 구례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발전하는 월간 오리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